

2020. 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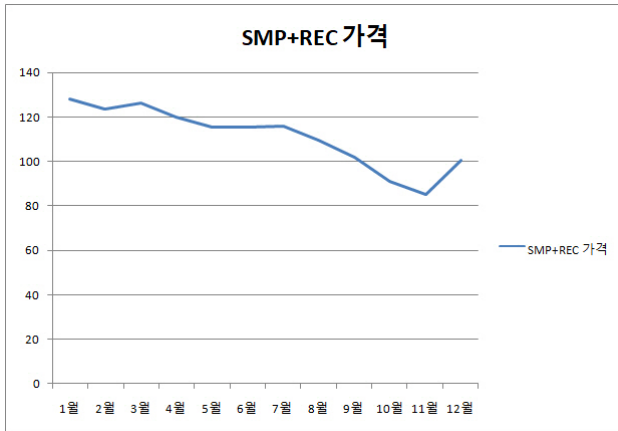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에너지경제

[기사링크](#)

( 요약 ) 신재생에너지 단가, SMP·REC 동반 상승에 3개월만 최고치

- SMP+REC 단가 3개월만에 1kWh당 100원대를 회복
- 하지만 지난해 같은달 1325원보다 24.2%(32.06) 크게 낮은 수준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 토로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더해 산출되는 **신재생에너지 판매 단가가 3개월 만에 1kWh당 100원대를 회복했다.**

20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금까지 SMP 평균은 1kWh당 67.45원 REC 가격은 1MWh당 3만2994원으로 나타났다.

1REC는 1MWh(1000kWh)로 1kWh당

REC 가격은 3299원이다. 기준을 1kWh로 통일해 SMP와 REC 가격을 합산하면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100.44원이 된다.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100원으로 회복한 건 지난 9월 이후로 3개월 만의 처음이다.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최근 SMP와 REC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등했다. 1주일에 두 번 열리는 REC 시장에서 지난 주 두번째 개장한 17일 평균 가격은 3만7214원으로 1주일새 4468원(13.1%) 상승했다. 특히 지난 주 첫번째 개장일인 15일 REC 시장 가격은 3만5406원으로 그 전 주 두번째 개장일 10일 REC 시장 가격보다 2660원 상승했다. 이 상승 폭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SMP도 전력 수요 상승으로 지난달 50원대에서 지난 18일 68원대까지 회복했다. REC 가격은 REC 시장 수요량인 매수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상승했다. 매수주문량은 지난 1일부터 상승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26일 REC 매수주문량은 9만851건으로 지난달 내내 10만 REC 밑을 유지했다. REC 매수 주문량은 이달 들어 △1일 14만3835REC △8일 34만1428REC △15일 39만3082REC △17일 44만5644REC 등으로 급증했다.

**이달 신재생에너지 평균 단가는 100.44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같은달 1325원보다 24.2%(32.06)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REC 가격이 일시적으로 회복했지만 시장 왜곡이 심해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정부의 REC 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0. 12.21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그 외 )

( 출처 ) 연합뉴스

[기사링크](#)

( 요약 ) 미 의회, 1천조원 규모 '코로나19 부양책' 합의 도달

- 합의안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미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가 실업급여 제공, 백신 배포와 학교 지원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 8부 능선 넘었지만 아직 하원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해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회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약 9천억 달러(한화 약 1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크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이같이 밝히고 "더 많은 도움이 오고 있다"며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매크널 대표는 이번 법안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합의안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미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가 실업급여 제공, 백신 배포와 학교 지원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블룸버그는 양당이 아직 합의안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완성되면 이날 밤 즉시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AP통신은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총무의 대변인은 하원이 21일에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상원도 21일에 투표할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양당은 부양책과 함께 1조4천억 달러(약 1천54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양당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부양책을 논의해왔으며 일부 쟁점을 놓고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2020. 12. 22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122084181>

## ( 요약 ) 생존 키워드 된 ESG...실적 좋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 주력 사업을 잘 키우면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
- ESG관점에서 부정적인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큰손들이 투자를 집행

과거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하나의 트렌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이 도입되고 주주행동주의가 강해지면서 사회적책임투자(SRI)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주요 대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들도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력 사업을 잘 키우면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20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글로벌 ESG 투자자금은 지난 2분기 말 40조 5000억 달러(약 4경 4530조 원)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ESG 기업에만 투자하는 ESG 상장지수펀드(ETF) 규모는 880억 달러까지 커졌다. 6개월 만에 작년 580억 달러(ETF 기준)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연기금, 운용사 등 큰손들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 관점에서 부정적인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ESG에 역행하면 투자금 유치도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7조 달러(약 7690조 원)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운용 기조는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준다. 블랙록은 총매출의 25% 이상을 석탄화력 생산·제조에서 벌어들이는 기업을 올해 주식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 여성이 2명 미만인 기업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국민연금도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SG가 D등급인 종목은 내년부터 벤치마크 대비 비중을 초과해 편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증시에서도 ESG 역량이 탁월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SK 그룹 관련주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기업은 실적도 성장세면서 ESG 경영까지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0월 석탄 관련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ESG의 3대 요소인 지배구조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배당 확대가 예상된다”며 “소액주주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K는 한국 기업 최초로 **RE1(45,900 0.00%)**(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공식화했다. 계열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KC(93,700 +207%)**는 지난 14일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SK 이노베이션(187,500 -0.53%)**은 페플라스틱을 분해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주주가치(배당)가 우수한 기업으로 **삼성전자(73,000 0.00%)**, **현대차(187,000 -1.06%)**, **한온시스템(15,250 -1.93%)**, **현대모비스(249,000 -0.40%)**, **SK 두산밥캣(29,800 -1.49%)** 등을 꼽았다. 성장과 ESG를 동시에 잡은 기업도 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으로 **신세계(238,000 -0.83%)**, **LG 전자(94,900 -0.94%)**, **오리온**, **매일유업(69,900 +0.43%)**, **호텔신라(81,100 -1.10%)**, **SK 한온시스템** 등이 거론된다.

펀드를 통해 ESG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SRI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도 많아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SRI 펀드에 310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 SRI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연초 이후 20.78%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테마펀드인 가치주(수익률 14%) 공모주펀드(8.94%) 금펀드(22.83%)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마이다스책임투자펀드는 올해 43% 이익을 거두고 있다. 삼성착한책임투자펀드는 올해 30.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ESG 펀드로는 뱅가드 ESG 인터내셔널스탁 ETF, 아이셰어즈 ESG 어웨어 MSCI USA ETF 등이 있다. 뱅가드 ESG 인터내셔널스탁 ETF는 10월 초 대비 16.9% 올랐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19 이후 SRI 펀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 12. 22

( 신·재생에너지 / 인프라 / 부동산 / 기타 )

## ( 출처 ) 한국일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4698&aid=00005649948&rankingType=RANKING>

## ( 요약 ) 전국민이 투기세력?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규제지역' 산다

- 정부는 집값 안정화란 지상과제 실현위해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규제지역이 되레 늘어나  
-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투자가 인근으로 몰리고, 그 결과 인근지역도 규제지역이 되는 악순환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36곳을 지정했다.

사진은 18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정부는 17일 전국 36곳을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부산 9곳·대구 7곳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 명단에 새롭게 올랐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었다. 전국 시군구 226곳의 절반 가량이 '규제 사정권'에 든 셈이다.

을 들어 부동산 규제지역이 집중적으로 늘면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정대상지역에 살게 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란 지상과제 실현을 위해 최근까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과열을 다독이고자 지정하는 규제지역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어난 것**이다. 뛰는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하면 인근 지역의 집값만 더 뛰고 또 다시 규제에 묶이는, '규제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정부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3632만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70.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부가 과열이라 판단하면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이 됐는데도 광풍이 가리았지 않을 땐 투기과열지구가 된다.

조정대상지역 111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2016년 11월 기준) 37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치다. 또 문 정부 출범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됐으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규제지역은 부동산 광풍이 휩쓸 올해 급증했다. 지난 2월만해도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불과했으나, 6월 69곳으로 뛰고, 그로부터 반년도 안 돼 100곳이 훌쩍 넘었다.

규제지역이 계속 확대된 것은 '풍선효과' 때문으로 해석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가 막히자 인근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그 결과 인근지역도 규제지역이 되는 식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17일 신규 규제지역 발표의 풍선효과도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추세다.

이 같은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효과 반복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실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올랐는데 대출은 막히니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에는 왜 없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를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을 수요 억제 대신 공급 확대로 전환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